

“생계 막막하지만 방역 우선...감염고리 확실히 끊었으면”

광주시 '준 3단계' 거리두기 20일까지 연장...시민 반응

“또 연장이라니”...소상공인 임대료·생계 걱정엔 한숨만
“코로나 고통 분담 인내하지만 임대료 보전 등 배려하길”
초·중·고 14일부터 부분 등교...학원 10인 이상 집합금지

예초 10일까지로 예정됐던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됐다. 광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기대했던 만큼 줄지 않고 있어 감염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야 할 때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등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민들은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연장 조치와 관련, 기존 확진자 추이 등을 감안해 충분히 예상했던 방역 지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에도 하루 평균 9.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

는 등 감염 차단 효과를 보지 못했다. 8일에는 '준 3단계' 조치 이후 가장 많은 17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441명(지난달 27일)→371명(28일)→323명(29일)→248명(30일)→235명(31일) 등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이 때문에 광주시가 이날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기 위한 대책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기존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연장된 방역 지침도 일부를 제외하면 예전과 비슷하다.

다만,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14일부터 부분 등교로 전환한다.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고3을 포함한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등교해 대면수업을 받게 되며, 이같은 부분 등교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30일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우 방역 당국의 방침을 이해하면서도 얼마했던 연장 소식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예전에 견줘 매출이 40% 이상 급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기존과 달리, PC방, 게임장·오락실 등은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서구 차평동에서 PC방을 운영중인 김모(여·50)씨는 “PC방이 이번에 집합금지가 아니라 제한시설로 완화됐지만 달갑지 않은 않다”면서 “어차피 미성년자 출입제한에 음식물도 판매가 안된다고 하는데, 단속만 심해지고 오히려 일거리만 늘 것 같다”고 푸념했다. 그는 “차라리 손님이 오지 않는 이상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해 빨리 사태를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PC방이 집합금지에 들어간 이후에도 매일 임대료와 통신비, 관리비 등으로 약 700만 원대의 고정지출을 납부하고 있다.

북구 운암동 코인노래방 운영자도 “PC방은 집합제한으로 바뀌었다는데, 한 방에 한명씩 입장하게 하고 마스크 덮개와 소독을 하면 PC방과 다를게 없는 우리는 뭐냐”고 반문했다.

광주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러다 죽겠다며 울면서 연락하는 회원들의 전화



인적 드문 재래시장

광주 북구의 한 재래시장 밥집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이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한산하기만 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시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많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은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

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회원 210명을 둔 광주목욕업중앙회 관계자는 “영업은 못하고 있지만 승강기·소방·전기안전관리비에다 교통유발분담금 환경유발분담금 등 수도 없이 돈이 들어가

고 있다”며 “갑작스레 집합금지대상에 추가되는 바람에 휴업을 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장소·날짜 미리 공개...교육청의 이상한 몰카 단속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전 소리만 요란...1건도 적발 못해
범죄자 흔적 지울 시간만 쥐
매달 육안검사 지시 논란도

수조사 결과 단 1건의 적발건수도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지역 교육계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 후속 조치로 하달된 정기검사 업무까지 떠안게 되면서 관계 교·직원간 업무분장 논란도 일고있다.

9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청별로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긴급점검 한 결과 광주·전남을 포함해 대부분 점검이 끝난 현재까지 적발 건수가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긴급점검은 김해와 창원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달아 적발되며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하지만 이 ‘요란한 전수조사’를 놓고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단속 계획을 공표한 탓에 범죄자들에게 불법 촬영 카메라를 회수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긴급점검을 시작할 테니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숨긴 범죄자들은 알아서 조심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점검과정과 후속조치에서 드러난 시 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교 불법촬영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 지침을 받은 뒤, 2018년 구입한 관련 장비가 최첨단화 된 불법 카메라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21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기한 안에 점검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은 “적발 장비를 구입 후 한 차례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안일한 행정은 뒷전으로 하고 외부업체 용역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식 발상이다”고 질타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선 학교에 하달된 ‘정기적인 점검’ 업무도 논란이다. 앞으로 시행할 정기점검을 보건교사가 해야 할지 행정실 직원이 할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가 무용지물인 상태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정기점검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단속속비도 미흡한 상황에서 매달 점검을 하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점검장비로도 적발하기 어려운 불법 카메라를 육안으로 찾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도피 3개월만에... ‘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구속

황주홍 전 의원(민주평화당)이 9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

됐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전 의원은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나 황 전 의원은 도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부산과 서울 등 황 전 의원의 거

처를 추적한 끝에 지난 7일 검거했다.

황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저작권자 허락없이 개작했더라도 비영리 공연 땀 저작권 침해 아냐”

2심서 저작권법 위반 무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원작을 변형·각색해 2차적 저작물 수준으로 ‘개작’하더라도, 비영리적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저작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300만원)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2013 흥부가 기기막혀’라는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가·동의 없이 수정 및 각색, 수 차례에 걸쳐 공연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정점은 원작을 ‘2차적 저작물’이 될 정도로 수정·각색한 경우라도,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공연인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지 여부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29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36조 1항)’고도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각색한 저작물의 경우 서구 주민들로 이뤄진 비영리적 목적의 극단이 공연한데다, 해당 공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판단했다. 해당 저작물이 ‘2013 흥부가 기기막혀’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개작’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